

시민 편의성과 동떨어지는 시금고 기준 바뀌야



전일칼럼

김성수
논설위원



올해 광주시가 연간 7~8조원 사이의 예산을 4년간 맡길 시금고 선정에 나선다. 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7일까지 열람기간을 갖고 오는 8~9월께 광주시의회 심의, 금고지정 설명회, 시중은행 제안서 접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1·2금고를 지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금고지기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총 5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올해 개정 조례안에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편의성 등을 더욱 세분화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정한 선정기준에서 관심을 끄는 건 '시민 이용 편의성'이다. '시민 이용 편의성' 항목엔 은행지점, 무인점포, ATM 대수 등을 기준으로 배점(100점 중 7점 부여)을 준다. 하지만 광주시의 시금고 지정 기준인 시민 이용 편의성에 따라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의 시금고 지정 기준은 단순 점포수가 많은 은행에 고점을 주는 형태다. 문제는 최근 시중은행의 지방도시 점포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금융정보통계시스템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시중은행(1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말 기준 점포수는 1464개로 지난 2013년 같은 기간 1653개 대비, 10년새 11.43%(189개) 감소했다. 현재 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수협, 중소기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6대 광역시별 10년새 점포 폐쇄 수는 대구 83개(371→288)로 가장 많았고, 부산 79개(549→470), 광주 33개(201→168), 울산 7개(132→125)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천 5개, 대전 8개가 증가했다. 하지만 점포 폐쇄율을 보면 대구가 22.7%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가

시중은행 점포 폐쇄 증가세 시민 접근성·서비스 저하로 금고 기준 '감소대책안' 필요 경쟁 이끌어 기여도 높여야

16.4%, 부산 14.4%, 울산 5.3%등의 순이다. 광주가 두 번째로 폐쇄율이 높은 것은 기존 점포수가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점포가 줄어드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시중은행들이 유독 광주 지역에서 마른 수건을 짜낸 격이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기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개입, 지난 2019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년 뒤 2021년부터는 점포 폐쇄가 더욱 노골화됐다. 실제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새 점포 폐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2년 6.3%였다. 그 뒤를 2021년 4%, 2023년 3.9%

순이다. 최근 3년새 점포 폐쇄율이 더욱 심화된 셈이다. 점포 폐쇄는 지방을 중심으로 늘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해당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은행 접근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점포가 줄면서 창구 혼잡도 및 대기시간 증가 등의 은행 서비스도 악화되고 있다.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보자. 과연 광주시 시금고 선정 기준안에 담긴 시민 이용 편의성이 광주시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선정기준엔 단순히 점포 수로 점수를 준다는 게 시민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를 보유한 은행권에 높은 배점은 당연히 되지만 향후 은행권이 시민 이용 편의성을 위해 적정 점포수를 유지할 지는 의문이다.

결국 시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은행 점포 감소 대응안이 마련된다면 '점포 폐쇄'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은행권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본점으로부터 올해도 1~2개 정도의 점포 폐쇄 압박을 받고 있는 지점(지역본부)들이 광주시가 점포 유지 기준안을 시금고 선정에 반영한다면 시금고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존 점포를 유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시금고 선정시 적정 점포 수 이하 은행에 대한 평가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있다.

광주시는 시금고 선정 기준에 은행권의 지역기여도를 끌어올릴 방안 마련도 필요

해 보인다. 은행 점포수, 기여도, 지자체와 연계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는 특성은 행의 독주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존재해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광주은행(1금고) 40억원, KB국민은행(2금고) 20억원 등 모두 60억원이다. 이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 광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대전시(6조5000억원) 금고 협력사업비는 148억원이며, 울산시(5조1000억원)는 135억원이다.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선정 때마다 2013년 120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60억원으로 8년 새 반토막이 났다. 채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시름이 깊지만,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며 "올해 금고 선정 시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광주시가 한해 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인 돈을 맡길 시금고 선정을 위해 기준안을 일부 수정했다. 그럼에도 지역점포 감소로 은행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금고 은행의 지역협력 사업비는 반토막 난 상황이 과연 현실성 있는 시금고 선정기준인지 의문이다. 광주시의 '시민을 위한' 시금고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덩으로 시중은행간 시금고 경쟁을 유도해 지역협력 사업비까지 끌어올린다면 이게 바로 '수치맞는 장사' 아닐까 싶다.

비수기 없는 오락 브랜드, 마동석 표 액션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허명행 감독
범죄도시 4

간드러진 트로트를 들으면 발바닥이 간지럽다는 사람이 있다. 드라마를 보면 눈물·콧물 샘이 저절로 열린다는 사람도 있고 감동 가득한 뉴스를 보면 가슴이 저릿저릿하기도 하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노와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누군가 안마의자에 앉았다 나온 느낌이라 해서, 전신을 강타하는 느낌일까 싶기도 하다.



'범죄도시 4'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아무래도 네 번째 시리즈라서이지 않을까 싶다.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노라는 부가의 미가 덩으로 주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석도 형사(배우 마동석) 및 경찰을 주축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잔혹함을 더해가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시리즈는 주욱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우 마동석을 위시한 제작군에서는 '범죄도시' 시



허명행 감독 '범죄도시 4'.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리즈 8가지 목표로 삼고 있다 한다. 시리즈 4까지 이어온 것은 웰메이드 영화로 일컫는 '범죄도시 1'(2017)의 후광 덕이다. '범죄도시 2'(2022)와 '범죄도시 3'(2023)의 미흡함을 개선하거나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범죄도시 4'의 평가는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 다행히 그간의 뻘찬 연출, 작위적인 신 등을 어느 정도 개선했고 미장센은 무난했다. 스텐트 및 무술감독 출신의 허명행 감독의 액션 신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지능범죄와 결합한 잔인한 살해범죄마저도 사이드 주먹으로 해결하는 단순 호쾌함이 영화의 흐름을 관통했다. 빌런들의 역할이 막중하데,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백창기(배우 김무열)의 말 없는 섬뜩함과 IT업계 전제 CEO 장동철(배우 이동휘)의 말 많은 잔인함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강렬했다. 거기에 비해 광수대의 사이버 팀과의 공조 대응은 강도나 밀도가 덜 촘촘해 보였다. 전반적으로, 시퀀스와 시퀀스를 연결하는 매끄러운 구성이 아쉬웠다. 강함의 연속이 가져오는 불안한 피로감이 객석에 드리워졌다는...

물론 '범죄도시 4'를 두고 예술성, 구성력, 짜임새 등을 거론하기에는 거리가 다분히 멀다. 그렇지만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만큼의 오락성은 붙들었다고 본다. 야외 봄나들이가 많은 4월은 영화관의 비수기라 하는데, 4월에 개봉한 마동석 표 액션은 비수기 없는

새로운 오락 브랜드로 자리잡는 듯하다. 요즘 TV를 켜면 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미혹수사의 되새김 등의 프로그램이 부쩍 늘어났다. 날로 극악무도해지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중들의 추리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는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중문화의 영향력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노파심이 일기도 한다. 일례로,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 청소년들의 폭력이 늘자,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폭력영화를 정책적으로 양산시켰던 적이 있었다. 영화를 통해 폭력욕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대리만족'의 효과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미국 사회의 청소년 폭력이 확산되고 더 난무해졌다. 폭력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야기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유학 보냈던 아들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를 모방학습하여 부모를 살해한 범죄도 있었다. 이 사례 때문이 아니라도 필자는 노와르·폭력 장르가 줄어들었으면 한다. 21세기 사회적 특성에 따라 영화의 장르가 확대되고 분화되기를 바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소비자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신문과 방송이 빛어낸 '대중(大衆)'은 케이블과 위성 등 다미디어·다채널 시대에 계층·취향별로 구분되는 '분중(分衆)'의 시대를 살아가다 이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개개인의 독자적인 목소리로 전체의사 표현에 이르는 '개중(個衆; individualized mass)'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창작의 영역이 확장되고 세분화되면 장르 또한 개성 넘치는 분화를 이룰 것이므로, 4월 24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